



Global Goings-on

OECD

아시아 국가들 연금 제도 개혁 필요 (Asian countries should reform their pension systems, says OECD)

OECD는 World Bank와 공동으로 출판한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을 통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근로자들에게 미래에도 지속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퇴직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노령화 문제에 대비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겪었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및 베트남을 포함하여 18개

국가의 퇴직소득 제도를 분석하였고, 보고서가 제시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공적연금제도의 보상범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 퇴직 전에 예금인출이 흔하다.
- 연금 저축이 종종 일시불로 지급되며, 일생에 걸쳐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지 못한다.
- 연금액 지급이 생계비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생산연령인구 (working-age population)의 평균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남아시아는 7.5%, 동아시아는 18%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서 공적 제도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에게 안전망 퇴직 연금을 제공 할 수 있는 사회 보험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권고하였다.

▷ 근로자의 최종 임금수준에 기반을 두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생애평균 소득을 이용한 연금 지급권의 계산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보다 안정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 임금 수준에 기반 한 제도는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보다 나이에 따라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많은 국가들이 퇴직 전에 연금을 인출하거나 정기적인 퇴직 소득 대신 일시금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정기적인 급여, 즉 연금(annuity)을 통해서만 그들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퇴직 시 이들의 예금액이 고갈될지 모르는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

▷ 국가들은 생계비의 변화가 연금 급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들 중 오직 중국과 필리핀만이 반영하고 있다.

전체 보고서: <http://www.oecd.org/dataoecd/33/53/41966940.pdf>

8 페이지 요약: <http://www.oecd.org/dataoecd/47/10/41941763.pdf>

OECD 2009년 1월 7일
 <원문링크: http://www.oecd.org/document/26/0,3343,en_2649_34487_41939482_1_1_1_1,00.html>

일본

의료진 부족으로 여성 암환자 치료에 어려움 겪어 (Doctor scarcity hurting cancer care for women)

최근 일본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수의 병원들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폐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적절한 암치료를 받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자궁암이나 난소암에 걸린 여성들이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과 다른 대형의료기관으로 몰려들고 있다.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과 수술대기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학회에 암치료 사례수를 보고하고 있는 전국의 약 270개의 병원 중 20 곳이 지난 2004년과 2007년 사이 자궁암과 난소암 외래 환자 진료가 1.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쓰쿠바 대학의 Hiroyuki Yoshikawa 교수는 몇몇 현의 병원들은 이미 환자가 최대 진료가능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병원은 미에대학이며, 다음은 치바암센터, 도쿄의대, 오사카대학순이다.

The Japan Times 2009년 1월 29일
 (원문링크: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nn20090129a5.html>)

영국

조산아의 공적비용 (Public cost of premature babies)

Oxford Centre for Health Economics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조산(Premature births)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매년 9억3천9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산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비용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 태어난 모든 조산아들을 대상으로 생애 초기 18년 동안 발생할 비용을 추정하였다.

비용추정에는 의료비와 교육비 뿐 아니라 조산아 부모들이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또한, 조산 예방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매년 약 2억6천만 파운드가 절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생아에 대한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산아들의 생존율은 크게 향상된 반면, 아직까지 이들은 만성 폐질환, 시력문제, 소화기관 문제, 감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저널 Pediatrics 에도 실린 이번 연구는 신생아치료 여부, 경도(mild)장애, 중등도(moderate)장애, 중증(severe)장애와 사망 등과 같이 예상되는 결과에 확률 및 비용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 비용의 66.4%가 비교적 조산시기가 늦은, 33-36주 사이의 조산아들로부터 발생하였다. 나머지 비용은 거의 모두 조산아가 출생 직후 병원에 머무는 동안 발생하였다.

미국 연구에서도 매우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NHS를 도와 신생아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립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BBC News 2009년 2월 2일
 (원문링크: <http://news.bbc.co.uk/2/hi/health/7860251.stm>)